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

| 기업지배구조

10

2020 October | VOL. 94

CORPORATE GOVERNANCE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1일(매월발행, 통권 94호, 비매품) 발행인: 전현희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COVER STORY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기업 비리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실업, 국고보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경영진 한두명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란 위와 같은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투자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정의와 기업지배구조가 지속가능경영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C · O · N · T · E · N · T · S

- 01 **전문가코칭**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윤리
- 02 **사례돌보기**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 03 **보고서리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이사회 리더십
- 04 **중소기업 CSR 백서**
중소기업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백서 _ DO(실행)
- 05 **국내외 동향**
- 06 **행사소식**
- 07 **문화 속 기업윤리**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의 첨병
- 『자본주의의 감시자들』
- 08 **지식1G**
주식회사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 및 행위
- 09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 배포 안내**
- 10 **독자퀴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신진영

기업지배구조는 무엇이며 기업에 왜 필요한 것일까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 감독하는 법적, 제도적인 체제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자본을 유용하지 않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하도록 경영진을 감시(Monitoring)하고 제한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는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시장경제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기반이 됩니다.



전문가 코칭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윤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과 투자 행태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전략을 세우고 경영 일선에 적용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¹⁾ 경영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ESG 경영을 장려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는 ESG 투자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올해 초부터의 기업 실적을 보면, ESG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의 실적과 이들 기업에 투자한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ESG 관련 인덱스 펀드²⁾의 88%가 일반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56개국 6,000개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주가 수익률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주가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의 주가 방어 능력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 지배구조와 전반적인 ESG 성과가 우수했던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적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과 하버드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공급망 관리, 협력사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우수한 지배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현황, 이를 수렴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결과,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까지 탄소배출을 18%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월마트는, 90%의 탄소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해온 월마트는 코로나19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의류업체 부후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음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고 주가 역시 폭락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노력한 기업들은 급여 삭감, 무급휴직 등을 시행할 때 종업원들의 동의를 보다 쉽게 얻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다시 그들을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ESG 경영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가 폭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직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와 환경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2)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 수익률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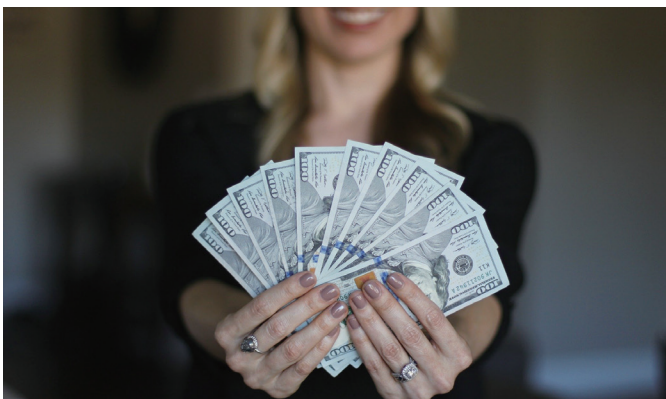
사례돋보기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유형이다. 투자 금액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며 자본 유치가 수월하고 여러 명이 투자하기에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인 문제*다. 투자자의 자금으로 경영을 대신하는 대리인, 즉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다. 경영자는 주주보다 우월한 정보를 활용하여 배임, 횡령, 채용 비리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번 호 사례돋보기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어떻게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실제 기업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경영자와 주주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싶다면? - 인센티브 보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즉 보상을 주면 경영자가 투자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

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인센티브 보상으로는 현금보너스나 스톡 옵션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는 스톡옵션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금보너스는 경영자가 미래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스톡옵션 또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경영전략을 선호하게 되며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아 경영진의 노력과 주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대리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제장치다. 기업 외부로는 외부감사인, 기관투자자, 채권자, 증권집단소송, 투자은행, 정부 등이 있고, 기업 내부로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주체들은 적절히 경영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주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하여 대리인이 주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



■ 창업자, 스타 CEO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 이사회

창업자나 대외적으로 인기가 높은 스타 CEO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두자니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내쫓자니 구성원들에게는 힘이 없다. 이럴 때 창업자나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이사회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다. 잡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성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민감한 연봉 문제로 프로젝트 팀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영입한 CEO인 존 스컬리와도 심각하게 부딪치기 시작했다. 조직 분위기는 악화 일로를 걸었고 실적까지도 부진해졌다. 잡스의 지나친 독선과 기업가치 훼손에 이사회가 나섰다. 표결을 실시해 창업자이자 회사 지분까지 상당히 소유하고 있던 잡스를 애플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면? - 외부감사

‘존경받는 기업 10위’, ‘10년 만에 미국 재계 서열 5위까지 오른 기업’, ‘미국 MBA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990년대 무렵 엔론의 화려했던 대명사들이다. 이렇게 잘 나가던 엔론은 어쩌다 분식회계의 대명사가 됐을까? 엔론 사태가 발생한 2001년 당시의 외부감사 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엔론의 경영진은 유명회사를 만들어 거대한 부채와 거추장스러운 대규모 고정 자산을 털어냈고, 엔론의 신용을 포장해 건설한 기업으로 인식 시키는데 성공했다. 2001년 유명회사 중 한 곳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엔론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거짓된 재무제표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엔론 사태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도리어 회계 부정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 기업에 컨설팅 서비

스와 외부감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문제였다. 회계법인에서 앤더슨은 엔론 외에도 월드컴, 글로벌크로싱의 분식회계 역시 눈을 감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재산을 날린 소액 주주들과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실업자들이 미국 사회에 대거 쏟아졌다. 이를 수습해야 하는 미국 주식 시장과 정부 재정도 큰 타격을 입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들을 감시하는 기업회계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회계법인이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와 외부감사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장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영진이 처벌받도록 하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상장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보호법)을 제정했다.

■ 경영의 비재무적 요소까지 관여하려면? - 기관투자자

‘땅콩회항’.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유명한 갑질 사건이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일반 대중들이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실질적으로 항의를 할 방법은 딱히 없었다. 태극마크를 달고 운행하는 국적기 항공사에 국민은 과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투표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로 고(故)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친 국내 첫 사례였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즉 집사처럼 주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경영자의 연임을 반대한 것이다.

기관투자자란 연금, 기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법인투자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개인 소액주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모니터링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도 크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소극적이었으나,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의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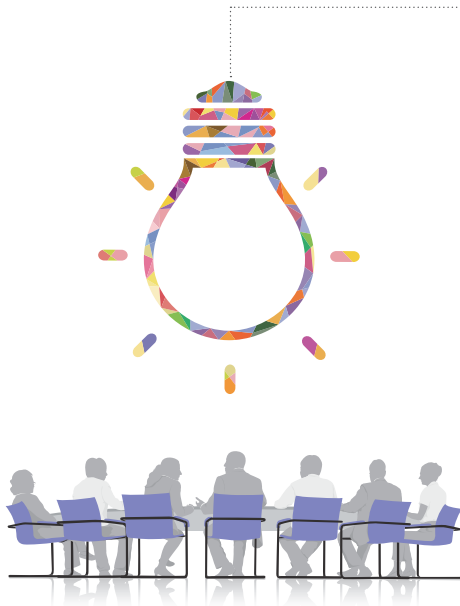
이사회, 외부감사, 기관투자자 외에도 투자은행, 적대적 M&A, 금융기관, 주주행동주의 등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에 의해 구성된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기업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발전해나 가도록 돕는 존재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없다면 기업은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어 무사 안일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지나친 리스크를 안고 각종 부정에 빠질 수도 있다.

* 자세한 참고자료 리스트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웹진 내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리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이사회 리더십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기업에 있어 주주 뿐 아니라 소비자, 임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비즈니스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주주 중심이 아닌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린 페인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주주 중심 모델에서 기업 중심 모델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경영진을 가장 근거리에서 자문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사회의 개선과 바람직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리뷰는 한국 동아일보 기자와 린 교수와의 대담을 재구성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조정되고 통제되는 시스템 전반을 말한다. 최근 까지 지배구조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익을 나란히 맞추므로써 경영진이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같은 배경으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1997년 기업의 목적이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했지만, 2019년에는 '소비자, 직원,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선언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그동안 기업들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최대한 많은 수익을 창출해 현금을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가를 올리는데 활용해 왔다. 장기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를 줄이고 빛에 의존하며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아웃소싱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더 취약했다. 매출은 줄었지만 현금은 없고 부채 비중은 더욱 높아졌으며 인력 유연성은 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자원마저도 없었다. 일부 기업은 소비자가 아예 사라졌으며 공급망은 파괴되었고 채무 연장도 어려워졌다. **코로나19는 기업이 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필요로 한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소비자뿐 아니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올리게 됐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익률을 좀 더 올릴 것인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할 때 후자를 택하게 됐다. 목숨을 구할 약의 가격을 정할 때도 시장 최가가 아닌 소비자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게 됐다.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효과성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주주권 보호, 특정 규칙과 정책의 중용 등도 있겠지만 그중 핵심은 이사회의 효과성이다.

* 미국 주요 대기업 CEO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GM의 메리 바라 등이 멤버다.

이사회가 기업의 전략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기업에 건설적인 지원과 비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곧 감시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발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나쁜 지배구조는 이사회가 책임을 다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다. 이러한 이사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사전에 세부 안건과 회의 시간이 빽빽하게 정해져있어 질문과 우려사항이 있더라도 발언하기 어렵다. 이런 이사회에서는 핵심적인 감시활동, 즉 성과를 추적하고 재무 보고의 정확성을 따지고 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쁜 지배구조의 영향은 당장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경쟁력 하락, 기업과 주주, 특히 소수 주주와 폭넓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로 드러난다.

기업 중심 지배구조와 이사의 역할

이처럼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기업 중심 지배구조는 주주 중심 지배구조와 달리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기업 전체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기존의 주주 중심 혹은 이해관계자 모델에서의 이사회는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한된다. 그러나 **기업 중심 모델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자문하고 모니터링 할 뿐 아니라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기업이 전략, 수익모델, 투자 우선순위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사항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 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와 리더의 책임이다. 특히 이사회는 기업의 자원을 어떤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이 있다.

이사회 독립성의 필요성

가족 기업에서 이사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단일 가족이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해 이사회를 지배하는 동시에 회사를 운영하면, 그들 가족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업이나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 기업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강력한 사외이사를 선임해, 그들에게 독립적인 판단을 표현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사의 독립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때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 경영자를 물리는 결정을 할 때다. 그래서 **이사는 본인이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자의 친구나 가족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

이사회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

이처럼 앞으로 기업은 주주 중심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모니터링하고 자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관행 개선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사의 평가다. 이사회 토론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방법은 이사회 스스로가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인터뷰, 제3자에 의한 관찰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외부 독립기관의 설립이다. 이사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이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도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독립성 확보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사추위가 되어야 한다.

넷째,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된 다양성 확보다. 성별, 연령별, 전문성에 따른 다양성은 이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사회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의사결정도 편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주소통이사의 선임이다. 한국 대기업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 한 명에게 별도로 주주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겨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시장 자본주의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집단 간 불평등이 커지고 근로자 임금이 수년 간 정체하면서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의 도입이 필요한 때다.



* 참고 자료 -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구호 이전 옛말 소비자-지역사회 이해관계도 고려를』 DBR에서 발췌 후 편집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백서

중소기업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백서 _DO(실행)

- 『중소기업을 위한 CSR 백서』는 중소기업이 CSR(Corporate Sustainable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구성의 짜임새와 효율적인 실무 적용을 위해 생산 및 품질관리 방법론 중 하나인 PDCA의 사이클을 차용했다. 이번 호는 두 번째 단계인 DO(실행)로, 기업이 CSR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준 대두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공급사들의 참여도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2년마다 기업의 공급망 인권 관리(강제 노동)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노더체인(KnowTheChain)'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품질, 안전, 친환경, 투명경영, 노동/인권/차별금지 등의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여부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1년마다 공급망 내의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필요성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 취득이 유효하다. 또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정부 지원이나 정부 사업 수주 시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다.

기업 인증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민간, 정부 등 발급 주체와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여기서는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인증들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인증명	취득 이점	기타
환경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공공기관 의무구매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당 5만원의 신청 수수료 및 인증 심사비 및 출장비 부과. 인증사용료는 제품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름.

자세한 정보는 환경표지 홈페이지(<http://el.keiti.re.kr/service/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명	취득 이점	기타
장애인 표준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금 최대 10억 원 지원. (실제 투자금액의 3/4 지원, 사업자가 1/4 투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 소득세, 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인증명	취득 이점	기타
소비자 중심경영 (C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중소기업의 개별 기업당 용자한도를 6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상향지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하도급 분야, 유통분야,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서울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 비용(VAT 별도) 신규평가: 대기업 : 6,000,000원, 중소기업 : 200,000원 재평가: 대기업 : 4,000,000원, 중소기업 : 150,000원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중심경영 홈페이지(<http://www.kca.go.kr/cc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태와 사업전략에 맞는 인증 활용 필요

이외에도 산업별, 분야별, 규모별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인증제도가 존재한다. 업태와 사업전략에 맞는 인증을 취득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체계를 마련한다면, 기업 경쟁력 제고와 혜택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65>, <https://www.fnnews.com/news/202006101707172687>



국내동향

국민연금, ESG 평가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모형을 활용해 기업을 중점관리사안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재무성과인 ESG 평가와 재무성과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경우, 기존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인 낮은 배당, 횡령·배임, ESG 등급 하락 등에 ESG 평가 요소를 구체화해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을 맡길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기업이 중점관리사안에 오르면 기업과의 대화 등을 거쳐 주주제안까지 나설 수 있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토대가 된다. 국민연금은 먼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년간 개선이 없을 시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때에도 개선이 해당연도 말까지 없게 되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한다. 이어 공개서한이나 주주제안까지 나설 수 있다.

* 참고 - 뉴스시스, 2020.09.09
국민연금, ESG 평가모형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9_0001160108&clD=10401&pID=10400

2019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 88.5% 감사·감사위원 교육 실시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 회사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30.5%포인트(p) 늘어난 88.5%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도 소폭 늘어나는 등 코스피200 기업이 회계투명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다.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62개사의 감사위원회 안건을 활동영역 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 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각각 9.7%p, 6.2%p 증가).

삼정KPMG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 감사제 도입으로 인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로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어 법제도 강화로 기업의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회계투명성 확보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0.09.14
삼정KPMG, 상장사 감사교육 확대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9/948173/>



해외동향

미·유럽 9개 제약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과학적·윤리적 기준 준수할 것

지난 8일, 미국과 유럽의 9개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적절한 데이터를 얻은 후 백신 승인을 신청할 것을 서약했다. 과학적·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지킬 것이며,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각국 정부에서 정치적 이유로 백신 승인을 앞당기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될 때까지 당국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명한 9개사는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엔테크, 존슨앤드존슨, 머크, 모더나, 노바백스, 사노피 등이다.

이들은 "항상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웰빙을 우리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과학적 절차의 완결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0.09.09
'코로나 백신' 미·유럽 9개 제약사 "절차 지킬 것" 서약
<https://www.fnnews.com/news/202009091302237318>

유럽연합, 그린산업 육성으로 코로나19 극복

유럽연합의 각국 정상은 지난 7월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2021년~2027년 다년도 지출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1조 8천 243억 유로의 30%에 달하는 5천 500억 유로를 탄소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프로젝트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산업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예산 확충, 세제 개편, 기업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도 환경 관련 기술개발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 유럽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0.08.27
EU 그린산업 육성 가속화... 한국기업도 진출 모색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55100003?input=1195m>



행사소식

윤경SM포럼 10월 정기모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모든 사업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인 디지털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주제로 논의한다.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된다.

주최 윤경SM포럼

일시 10월 15일 (목) / 오전 10:00 ~ 11:00

등록 best@ips.or.kr 이메일 신청

2020 Reuters Responsible Business Awards

로이터가 주관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 어워드. 비즈니스 혁신, 지속가능성 혁신, 비즈니스 리더, 청정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최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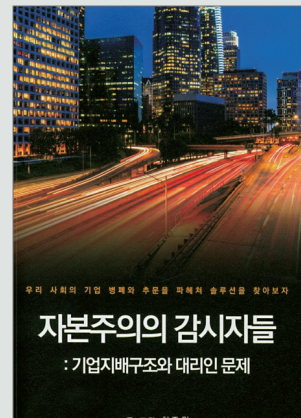
일시 8-9 October

등록 <https://reutersevents.com/events/sustainability-awards/conference-agenda.php>



문화 속 기업윤리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의 첨병 『자본주의의 감시자들』



- 한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처음 이슈가 된 시기는 1999년 외환 위기다. IMF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권력기관 출신이거나 오너일가와의 친분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 최근 수년 간 이사회 안건에 사외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기업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감시자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저자는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기업의 뿌리 깊은 병폐들을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여러 노력을 전개 중이며, 삼성전자는 기업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건강한 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조건이라는 것을 재계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유효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실적 변동성, 회계 불투명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 이미지 출처: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3111439&orderClick=LAG&Kc=#N>

지식1G



주식회사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 및 행위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 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주행동주의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배구조까지 손을 대면서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주주들은 주로 기업부실 책임을 추궁하거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은행, 연금, 투자기관,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되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 배포 안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 문화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안내서인 '기업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주요내용

-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 주요 공익신고 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소개 및 Q&A
- 공익신고 대상법률(467개)별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 (신고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20.11.20. 시행)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호)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



국민권익위원회



Q. 다음 중 이번 호에서 소개한 기업지배구조의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이사회
- ② 금융감독원
- ③ 기관투자자
- ④ 외부감사

독자퀴즈



지난 호 정답자는
우경수 님, **최현진** 님,
김태희 님, **김순정** 님,
이인호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crcbusinessethics@gmail.com)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